10년만에 한·미 정책 금리 역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올 한은 금리인상 '1회 vs 2회' 엇갈려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가 역전되며 한국은행 금리 인상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0~21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리를 0.25%p 인상했다. 미 금리가 연 1.50~1.75%로 올라 상단이 한은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졌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미국 금리 인상 예상 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은 3회가 유지됐지만 연준은 내년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시각을 나타냈다. 2019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 기존 2회를 3회로 상향했고, 2020년에도 2회를 예상했다. 지난 12월 이후 경기 개선의 속도가 빠르고 물가 역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금리역전이 당장 자본유출을 초래하진 않는다고 해도 한은이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금리차이는 더 확대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경기 여건만 놓고 본다면 한은이 금리인상 카드를 아직 꺼내들 때는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3%대 성장을 향해가던 국내 경제는 한국GM 철수 사태를 비롯해 미국의 통상압박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더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에나 1%대 중후반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놓고 1회와 2회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4월 혹은 5월에 올린다면 2회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7월 또는 3분기 1차례 인상을 점쳤다. 미래에셋과 메리츠종금, 대신증권은 5월 1차례 인상을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시기는 다르지만 연내 2차례 인상을 예상했다.

금리의 향배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3월을 건너뛰고 4월과 5월에 연달아 열린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다.

특히 경제전망과 소수의견 유무가 관건이다.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3.0%로 올린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에서 1.7%로 내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은의 금리 인상 횟수를 놓고 1회와 2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 연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4월 금통위에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를 다시 짚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농어촌공, 봄 농촌여행 코스 6선 선정·발표

봄꽃 나들이 가기 좋은 농촌 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봄꽃을 만끽하며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봄 농촌여행 코스 6선'을 22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는 ▲대전(대청호 자연생태관→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대청호 두메마을→대청댐) ▲충북 옥천(장수마을→정지용생가→풍미당→장계국민관광지→부소담악)▲전북 남원(남원역→춘향테마파크→할매추어탕→요천→달오름마을) ▲전남 구례(오산권역마을→사성암→엄사→쌍산재→산수유마을, 산수유문화관) ▲전남 여수(여수해상케이블카→갓고을마을→향일암→금오도→비렁길 자연밥) ▲울산(남창역, 남창옹기종기시장→외고산옹기마을→울산대공원→금곡마을→십리대밭, 태화루→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이다.

선정 마을은 대부분은 4월 전후로 봄꽃 축제가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잘 알려지지 않는 전국의 관광지 발굴과 농촌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월 계절·주제에 적합한 농촌여행코스를 선정·발표해 오고 있다.

/최수호 기자

롯데백 전주, '탠디 그룹전'

28일까지 60~70% 할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층 이벤트홀에서 구두 NO.1 브랜드인 '탠디 그룹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월 및 기획상품, 스크래치 상품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구두, 지갑, 밸트 등의 피혁류 전 상품을 품목에 따라 60~7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구두, 스니커즈를 8만9000~13만8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여성 패션 플로어 안성도 파트리더는 "이번 행사에서는 9000족 상당의 상품을 준비한 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이스타항공, 미야자키 노선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이 22일 오후2시부터 인천~미야자키 노선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가항공권은 편도 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6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판매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탑승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항공권 예약을 완료한 고객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미야자키 노선 왕복항공권, 이스타항공 로고상품,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을 50명에게 제공한다.

미야자키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신규 취항한 노선으로 대형항공사만 운항하던 노선을 저가항공사(LCC) 단독으로 취항해 화제가 됐다.

미야자키는 아시아의 하와이라 불릴 만큼 연평균 기온이 온화하고 다카치오 협곡, 사이토바루 고분군, 우도신궁, 아오시마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최수호 기자

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은행 실태 점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월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가량 지난 만큼 은행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원정보와 거래목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집중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빗썸이나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고객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수호 기자

구독문의 288-9700

하도급법 자료미제출 과태료 기준 '최근 3년 부과 횟수'로 단일화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해도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간 처음이면 2000만원, 두 번째면 5000만원, 세 번째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의 여타 법령에서는 이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부과 처분 횟수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법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과 같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의 다른 법령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수호 기자